

광주지역 아동복지시설 원생 고립 '어쩌나'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 분류...외박·면회 제한 사회적 단절·소외감 심화...대체활동 지원 절실

정부가 아동복지시설을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로 분류해 외출·외박·면회와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면서 시설 아동들의 고립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방역지침에 대한 책임이 시설 내부의 판단에 맡겨지면서 사회 단절과 감염 우려 속에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등 기본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사회복지시설 방역대응지침이 개편되면서 시설 내 개별 판단에 따라 외박이나 외부인 출입 등 일부 활동에 제한이 다소 완화됐다.

원칙적으로 외부인 출입은 접촉자에 한해 출입할 수 있고, 12세 미만의 미접종 입소자는 방역 수칙 준수 아래 등하교를 포함한 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가 수칙 여부 준수를 시설의 자율에 맡기면서 사실상 감염 발생과 방역 관리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시설 담당자의 몫이 됐다.

좁은 공간 안에 다수의 인원이 함께 생활하는 그룹홈이나 보육원, 지역아동센터는 집단 감염 우려에 문을 굳게 걸어 잠갔고, 자원봉사자·후원자와 함께 하는 교육·여가 활동은 물론 외부 견학 프로그램, 단체 시내 외출까지 대부분의 활동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방역지침이 시설 아동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심화시켜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돌봄과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 아동의 단절 생활이 길어질수록 이들이 사회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구의 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김모씨(51·여)는 "예전에는 가족 나들이나 키즈카페에 자주 갔었는데 지금은 외부활동은 전혀 못하고 가끔 하던 외식도 전부 배달음식으로 대신하고 있다 보니 아이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청소년들은 학원 등 필수

외출이 잦은데 매일 이동 경로와 누구를 만났는지 등을 따로 적어 관리하다 보니 아이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는 훨씬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육원 교사 박모씨(54·여)도 "30여명의 아이들이 전부 학교를 다니는데 이중 한 명이라도 접촉자로 분류되면 단체 시설이라는 이유로 입소자

전체가 격리된다"며 "아이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도 외부활동을 더 철저히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 보호아동들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김모(53·여)

씨는 "29평 남짓한 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수십명인데 관리 교사는 2~3명이다. 방역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해도 빈틈이 생기기 쉽고 그 안에서 감염을 도 높을 수밖에 없다"며 "보호아동들의 성장발달·교육 등 기존 활동을 대체할 프로그램 지원, 심리 건강을 위한 정기 진찰 등 사회적 관심과 보살핌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민빈 기자



검사를 기다리는 어린이들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 4일 오후 광주시 북구 선별진료소에 부모님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온 어린이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성훈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	-3~6	순천	-3~8	광양	-2~7
나주	-4~4	여수	0~6	목포	-2~3

일출 07:41 일몰 17:34
월출 09:57 월몰 20:22

장성	-5~5	흑산도	2~5
담양	-5~6	구례	-6~7
화순	-5~6	곡성	-7~6
영광	-5~2	완도	-1~6
함평	-4~4	강진	-4~6
무안	-4~3	장흥	-4~6
영암	-4~5	해남	-4~5
진도	-1~4	고흥	-4~6
신안	-2~4	보성	-5~6

목포	만조 03:35 16:30	여수	만조 11:14 23:15
	간조 08:55 21:39		간조 04:29 17:18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없이 131

겨울철 공사장 화재예방 '주의보'

광주 북부소방서는 4일 겨울철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공사현장은 가연성 자재가 많이 적재돼 있어 용접·절단작업 등 불꽃작업과 난방을 위한 화기취급으로 화재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관계인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장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 ▲공사장 화재감시자 배치 권고 ▲용접·절단 불티가 닿는 부분이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안전모, 내열성 장갑 등 보호구 착용 ▲작업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을 지켜야 한다.

김관호 예방안전과장은 "겨울철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부분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경찰 코로나 확진...동료 모두 '음성'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동료 경찰관들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4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화정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서부경찰서는 A씨가 소속된 순찰팀 8명과 근무 교대 시 간접 접촉했던 다른 팀 14명 등 22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했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부경찰서는 같은 팀 8명에 대해서는 이틀간 자가격리 조치했고, 5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또 음성 이 나올 경우 현장 업무에 투입할 방침이다. /홍승현 기자

“‘섬진강 수해’ 관련기관 책임 48% 한정”

환경분쟁조정위 “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족 인정”

섬진강 수해 주민들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관련 기관의 책임을 48%로 한정하는 조정 결과를 내놓았다.

4일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환경분쟁조정위는 섬진강 댐 대량 방류로 피해를 입은 구례 지역 신청인 1,963명 중 420명에게 63억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1,543명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 후 조정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순해사정 결과를 토대로 한 배상 신청액 대비 48%, 1인당 1,500만원 수준이다.

이 중 댐 및 국가하천 관리청인 대한민국의(환경부·국토교통부)가 60%, 댐

관리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25%, 지방하천 관리청인 전남도와 구례군이 각각 15%를 분담하도록 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구례주민 1,963명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섬진강 수해를 유발한 직무 유기 및 방임 책임을 지고 1,13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분청 조정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홍수기임에도 댐 수위를 높게 유지하고 하루 하천정비과 계획 홍수위를 고려하지 않고 방류를 해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해 관계 부처 합동 조사보고서와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댐 관리 및 운영 미흡, 댐

·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족, 국가·지방 하천에 대한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의 이유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법령을 위반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며 관련 기관의 책임 비율을 제한했다.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는 조정 수용 여부에 대한 전화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수재민들은 “수해로 집이 망가지고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조정 금액이 턱없이 낮은데다가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것이다.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공법단체 ‘5·18공로자회’ 승인

정부 공식지원...“5월 정신 선양작업 힘쓸 것”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공법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 이후 1년여 만에 정부의 공식지원을 받는 공법단체로 승인됐다.

4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에 따르면 이날 국가보훈처는 공로자회 설립 준비위원회가 공법단체 설립승인을 요청한 지 8개월여만에 공로자회를 공식 승인했다.

앞서 공로자회의 설립승인이 지체된 것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로자회의 공법단체 설립등기와 동시에(45·18구속부상자회가 해산되는 상황을 감안해 국가보훈처가 승인을 미뤘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5·18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 3개 사단법인 중 공로자회가 가장 먼저 공법단체로 승인받게 됐

다. 등기절차를 거쳐 공법단체로 출범하면(45·18구속부상자회는 해산되고 남은 부상자는 공법단체 부상자회로 통합될 전망이다.

공로자는 5·18유공자 중 유족과 부상자를 제외한 기타 1·2급과 무급 유공자를 지칭한다.

그동안(45·18구속부상자회에 소속돼 부상자들과 함께 활동해왔으며, 지난해 개정된 5·18보상법(약칭)에 따라 독립된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됐다.

임종수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은 “정신적 피해배상과 8차 보상법 개정에 주력해 공로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5월 정신 선양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중

전기종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10년 사용), 가정용 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 주행거리 100km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 주행거리 90km

안전필수 전복방지 (틸팅)기능
최대속도 60km / 주행거리 50km

에코 ev102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캐노피 1만원)

나이스 3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 1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친환경전자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본사:공정 전남 영광군 대지면 전(거쳐서) 133 (대지면) (거쳐서 산안단지내)

상담 061) 352-3010 내선 2번
문의 061) 872-8880,1

고흥지사 : 010-2548-7111
광주지사 : 010-3925-2181
영광지사 : 010-3925-2181

광양대리점 : 010-5355-1292
나주대리점 : 010-3626-3848
함평대리점 : 010-2602-6051

장성대리점 :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 010-2450-1954
전남 서부권역 : 010-3647-9709

emart
이마트 광주점
(광주터미널) 전시중!

전국대리점·취급점 문의
010-2034-0141